

학폭 못 막는 '허수아비 CCTV'

광주·전남 학교 1만개… 대부분 50만 화소 밑돌아
사각지대·화질 떨어져 얼굴·차 번호판 식별 못해

광주·전남 지역 학교에 1만108대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학교 폭력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렵고 사각 지대가 존재하는데다, 화질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전담경찰(스쿨풀리스)은 한 명이 20개 교 안팎을 맡고 있는 '무너만 전담경찰'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도 학교 내 CCTV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없이 범죄 발생 확인에만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경북 경산 고교생 자살사건으로 CCTV 활용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

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305개 초·중·고교에 2791대의 CCTV가 설치돼 운용중이며 전남에서는 834개교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CCTV 7317대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장애물로 인해 정확한 사물 식별이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돼 있는가 하면, 화질도 50만 화소 이하가 대부분이라 사고 발생 시 사람 얼굴을 식별하거나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기 힘든 형편이다. 또 적외선 기능도 없어 야간 사고 발생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광주의 경우 305개 학교에 설치된 2791개의 CCTV 중 50만 화소 이상은 고작 7.92%에 불과하고 전남도도 834개교의 7317개 폐쇄회로TV 중 2211대(30%)만 50만 화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학교폭력 근절을 목표로 추진중인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스쿨풀리스) 제도도 학교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광주의 경우 21명, 전남은 40명이 한 명당 20여개교 학교 폭력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학생 얼굴도 모르는 잘 모르는 경찰관이 가끔 학교에 찾아와 둘러보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광주경찰청이 들여다보고 있는 방



친절교육 받는 공무원

범용·어린이보호용·차량보호인식용 CCTV도 비슷하다. 총 491대의 CCTV 중 112대만이 100만 화소 이상의 화질을 가지고 있을 뿐 나머지 379대는 41만 화소 수준이다. 41만 화소의 CCTV로는 찍힌 영상 자료를 2배 확

학교에 100만 화소급 CCTV 확대 설치

정부, 일진 집중 단속

계기로 개최됐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학교의 CCTV 설치·운영상황과 외부인 출입관리 상황 등 교내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등굣길과 우범 우려 지역에 100만 화소급의 고화질 CCTV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학교폭력 취약지역 학교의 CCTV는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있는 시군구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게 할 방침이다.

전체 학교의 32%에만 설치된 경비 실도 2015년까지 전체학교의 86%로 확대한다.

경찰은 학기 초에 일진과 폭력 서클 결성이 집중되는 만큼 이를 중점 단속하고 상습폭행이나 보복폭행 등 중한 사안이 발생하면 강력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염소·개 수천마리 불법 유통

광주 광산경찰은 무허가 작업장에서 흑염소와 개 등을 도축, 유통한 혐의(축산물가공관리법 위반)로 김모(57)씨 등 일가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광주 서구 덕흥동에 무허가 도축장을 차려놓고 염소·개 등을 도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기간이 3년여에 걸친 점을 고려, 유통 물량이 수천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최승렬기자 srchoi@

조폭 두목 어머니 징례에 경찰 긴장

○…조직폭력배 두목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전국의 조폭들이 대거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비상.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13일 밤 10시1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에서 30여 년 간 당뇨와 혈압 등 지병을 앓다 숨진 A(여·79)씨가 광주를 본거지로 했던 전국구 폭력조직 두목의 모친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장례식장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는 등 긴장.

○…경찰은 별다른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조폭들의 집단 조문이 예상되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입장.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중고생 무더기 범죄자 만든 스마트폰

절도 혐의 38명 적발

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좌의식 없이 스마트폰을 훔쳐 판 중·고등학생들이 무더기로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은 14일 스마트폰을 훔치거나 빼앗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절도, 공갈, 점유이탈물 횡령 등)로 중학생 김모(15)군 등 광주지역 중·고교생

38명을 불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주시 남구 일대의 침실방과 교실, PC방 등에서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51대를 훔친 혐의다. 이들은 침실방, 학교 교실, PC방 등에서 스마트폰을 훔쳐 1대당 5만~20만원을 받고 장물업자 김씨 등에게 팔아넘겼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말 많은 학교자치조례 결국 법정 가나

광주시의회 재의결… 교과부, 대법 제소할 듯

말 많은 광주시 학교자치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갈 전망이다.

광주시의회가 14일 학교자치조례를 재의결함에 따라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지역 교육·사회단체도 조례 폐기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해 이를 둘러싼 지역 교육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최종 제정 여부는 7월께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학교자치조례 소송의 쟁점은 상위 법 위반과 예산 편성권 제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조례가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과 학교장의 예산편성 등 권한을 제한하는 등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교사의 평가권'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 교육계도 조례 폐기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6월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와 연계돼 진보·보수간 갈등은 격화되고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조례를 반대하는 학교자치조례 폐기를 위한 시민연대는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다음 주부터 조례 폐기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례를 박애한 광주학교자치조례제정운동본부는 "재의결을 흔영한다"며 "교과부의 상위법 위반 운운은 억지 트집이다"고 주장했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족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측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측석 프리미엄뷔페!!**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간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Canon

EOS 6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개논총판) 문의전화 062) 383-3000